

저널리즘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나

다듬어진 말글로 시민의 언어품격 높여야

김하수 / 한겨레말글연구소 연구위원 · 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언어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영역이 별로 없다. 정치, 상업, 종교, 법률, 문학, 학문 등에 언어가 어찌 빠질 수 있겠는가? 언어가 아닌 살상력 높은 무기가 더욱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 군사 부문 역시, ‘명령’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언어 기능이 다른 모든 기능을 압도하고 있지 않은가? 의술만 있어도 될 것 같은 의사들도 환자와의 소통 없이는 어떠한 병에도 접근하지 못한다.

저널리즘은 거의 전적으로 언어로 구성된 활동이다. 정치나 학문처럼 언어를 도구로 삼으면서 최종 생산품 역시 언어로 만들어낸다. 어느 누구보다도 언어에 예민해야 하는 것이 저널리스트들의 숙명인 셈이다. 현실적으로 저널리스트 그리고 저널리즘은 언어를 지배하고 있기도 한다. 저널리즘이 세금을 ‘폭탄’이라고 이름 지으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세금을 폭탄으로 알게 된다. 한국의 학문 수준이 한심하다고 일제히 외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숨을 쉬며 자식들을 유학 보낼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 20여 년 동안 우리, 아니 세계의 저널리즘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 때문이다. 저널리즘 자체도 무척 다양해지고 있다. 또 그 쓰임새도 다양하다. 이제 저널리즘은 정보 전달이나 보도만이 아니라 상업인 동시에 놀이이기도 하다. 동시에 광고이면서 자기 과시이기도 하다. 남에게 나를 드러내는 온갖 방식을 다 아우르는

것 같다. 심지어 장난으로 아무렇게나 만든 뉴스조차도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한국의 저널리즘은 숨 막힐 정도로 급하게 변모, 발전해왔다. 저널리즘의 특징이 옳든 그르든, 자발적이든 타율적이든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격동하는 정치계의 온갖 물벼락과 산사태를 고스란히 맞아온 탓이다. 몇 가지 사안을 검토해보며 저널리즘과 언어의 상호관계와 미래의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1950~60년대 저널리즘 언어

195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신문의 인쇄와 배포 과정에는 여러 가지 허술한 면이 많았다. 정치언어와 관련해서 본다면 종종 굵직한 필화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사건의 축에도 못 낄 일종의 순수 언어적인 오식 사고도 있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통령 사건’일 것이다. 대통령(大統領)이라고 활자를 뽑아야 하는데, 실수로 ‘견통령(犬統領)’이라고 활자를 뽑은 경우다. 하필이면 당시 이승만 정부와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던 신문사에서 일으킨 사고인지라 신문사 대표가 구속되기까지 했다. 그 이후로 신문사에서는 ‘대통령’이란 활자 세 개를 아예 한 덩어리로 묶어놓았다는 말도 있고, 더 나아가 개전자 활자를 아주 없애버렸다는 말도 들렸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통령(大統領)이라고 활자를 뽑아야 하는데, 실수로 ‘견통령(犬統領)’이라고 활자를 뽑은 오식 사고도 있었다. 1950년대 한국 신문에는 이러한 오식 사고가 많았다. 사진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견통령’을 검색한 결과. 대통령(大統領)을 ‘견통령(犬統領)’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가 의외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출처-네이버 라이브러리 캡처〉

당시의 신문은 모두 한자를 섞어서 보도하고 있었다.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읽기가 어려웠다. 대개 집안의 어른이 대표로 읽고 식구들한테는 훈시하듯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도 내용이 전파됐으니 일반 대중이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특이한 것은 사회면에는 한자가 별로 없었다. 지면이 늘어나면서 문화면, 여성면 또 ‘어린이란’ 등이 등장했고 이런 지면에서는 한자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문화’와 ‘여성’ 그리고 ‘어린이’라는 세 가지 영역은 신문이 대중 속으로 번져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언어적 기능을 한 열쇠말(키워드)이 된 것이다. 그와는 달리 방송은 기독교 방송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국영이었다. 1950년대 민간 텔레비전은 화재로 문을 닫고 1960년대가 되어서야 국영으로 방영되기 시작했으니 이렇다 할 논평거리가 없는 셈이다. 언어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면 아마도 당시 몇몇 희극배우들이 사용한 일부 격이 떨어지는 표현 등이 자주 지적을 받았고, 종종 스포츠 중계에서 지나치게 흥분한 선동적 표현이 입길에 오르는 정도였다. 덧붙인다면 당시 초창기 텔레비전의 광고 방송은 외국어에서 온 낱선 어휘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외래어 보급로 구실을

톡톡히 했다. 이와 같이 초창기의 저널리즘은 대중이 주도했다기 보다는 전문 지식인과 국가 권력이 주도했다. 그들이 ‘정보’를 생산했고, 대중의 ‘소비’를 유도했다. 대중이 저널리즘에 개입하고 참여하거나 흐름을 만들어가지는 못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저널리즘 언어 역시 전적으로 저널리스트의 몫이었다.

언어 규범의 완성

멀리 본다면 대한제국 시대부터, 짧게 줄여서 본다면 전쟁 이후의 저널리즘이 이루어낸 언어적 성과는 ‘언어 규범의 사회적 관철’이었다. 식민지 시대에 그 뼈대가 완성된 우리의 언어 규범은 광복 시점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관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신문의 판형 자체가 세로쓰기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식 체제를 따르고 있기도 했다. 그런 탓에 신문의 표기는 한자, 한글, 영문 세 가지 문자를 함께 섞어 쓰는 그로테스크한 문자 사용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아라비아 숫자까지 합하면 네 가지의 문자를 사용한 셈이었다. 교과서, 문학작품 등에서는 거의 대부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한국 신문에서는 여간해서 한자가

“

규범 정착의 문제를 넘어 다음의 시대적 욕구와 희망은 ‘시민사회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널리즘이 시민사회의 ‘언어’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할 것인가는 지난날의 경제발전이나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세계화 못지않은 중차대한 과제다.

”

사라지지 않았다.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하다 보니 띄어쓰기도 자연히 소홀했다. 한자 합성어는 대개 붙여쓰기를 했기 때문이다.

세로쓰기, 다문자 사용 등 별난 전통을 가지고 있던 한국 신문들도 컴퓨터의 충격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던 시점, 대략 1990년 전후부터는 판형이 가로쓰기로 바뀌어갔고, 한자 사용도 급격히 줄어들게 됐다. 세로쓰기에서는 숫자도 한자를 주로 사용했지만 그 이후로는 제목이나 기사 내용에 오로지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했다.

한글맞춤법은 그것을 제정한 이래 조선어학회(후에는 한글학회)가 언어 규범 관리를 ‘사실상’ 전담해왔으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문교부(현 교육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다가 1989년부터 시행된 현행 맞춤법부터는 국가가 관리했다. 주무 부처는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이 됐다.

언어 규범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언어 자체가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활동의 산물’이듯이 그 관리 역시 민간 부문이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적 쏠림도 방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민간 주도 의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언어와 관련된 산적한 사업이 널려 있고, 많은 예산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국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 편하기도 하다. 이 두 관점의 차이는 전문적인 토론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일단 저널리즘 입장에서 본다면 대화의 파트너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국가기관 형태를 환영하게 된 것 같다.

이후 국내 언론은 비교적 국가가 관리하는 언어 규범을 기본으로 충실하게 따르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맞춤법만이 아니라 외래어표기법 등에서 국가기관과 함께 언어 규범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왔다. 한때 시비가 많았던 ‘짜장면’의 맞춤법도 ‘자장면’으로 표기했으며, 방송에서도 된소리를 의식적으로 피하면서 호응했다. 이러한 노력은 ‘가스, 버스’ 등의 외래어와 ‘효과’에서의 경음화 기피 현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국립국어원에서 시도하는 어휘 순화 문제에 대한 저널리즘의 반응은 그리 신통하지 못하다. 국립국어원의 어휘 순화 사례가 아마도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나 또는 과한 순화를 시도한다고 여기거나, 순화가 자체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반 대중의 호응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아 삼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저널리즘은 언어 관리 기관의 정책에 기본적으로는 순응하지만 모든 문제에 발맞추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보도의 교양’ 추구

20여 년 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다양한 접촉면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되돌아보니 그것이 새로운 매체의 발생이었다. 약 10년 전에 다양한 종편 방송이 생긴다고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여론도 많았지만 이제 보니 방송 매체의 바닥틀, 시쳇말로 플랫폼이 바뀌는 사건이었다. 요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스마트폰도 모두 그냥 손전화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것 역시 잠재적인 또 하나의 매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매체가 바뀌고 또 진화해나간다고 해도 아직은 언어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양상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에는 언어 못지않게 영상(이미지)의 역할도 매우 강해졌지만, 메시지의 구체성은 아직 언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저널리즘이 이 사회에, 또 독자와 시청자, 달리 말해 사용자(정보 소비자)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언어의 과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방식이 유용하리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저널리즘은 초창기에는 보도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바로 그런 탓이었는지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정파적이 되어왔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보도에 관철해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갈등을 대하는 태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준 경우가 많았다. 사실의 문제보다 정파적 태도가 우선한 것이다. 이는 사회 갈등을 극복하는 것보다 오히려 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또 더욱더 갈라지게 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동시에 사회통합을 역행하는 기능도 해온 셈이다.

이러한 정파적 보도는 지나치게 많은 보도 기관들이 좁은 저널리즘 시장에서 경쟁하다 보면 저지르기 쉬운 자해행위다. 좀 더 미래 지향적인 ‘보도의 교양’을 추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더 낫지 않을까 한다. 이런 면에서는 ‘언어 문제’가 저널리즘에 기여할 수 있는, 반대로 저널리즘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호칭 문제, 남북한의 평화 공존을 위한 언어적 교류 활성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 다양한 교민사회의 문화적 통합, 보도문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언어로 번역 서비스하기 등을 들 수 있다. 의외로 방송에서는 외국인과 연예인을

참여시켜 진행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학 사회에서도 감당 못하는 ‘언어 인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한국의 저널리즘은 다른 사회에서 보기 어려운 흥미로운 문화적 공헌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보도 언어의 객관적 개념화 필요

저널리즘이 지나친 경쟁에 매몰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많은 보도 행위들이 지나칠 정도로 다양한 사건, 수많은 갈등과 충돌, 사회적 분노와 혐오 등의 문제를 부각하는 데 소모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더 높은 단계의, 혹은 더 심층적인 수준의 ‘담론’을 구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근간에 자주 보도되는 성평등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일부 보도는 이것을 남성과 여성의 성 차이에 바탕을 둔 대결로 몰아가는 면이 보인다. 여성들의 공개적인 호소에 대해 남성들이 숨어서 쓴 익명 댓글로 대비를 시킨다든지, 쿼어축제 같은 데서 나오는 ‘전반적인 요구’를 담지 않고 일부 자극적인 구호를 중심으로 보도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해당 기사를 눈에 띄게 할 수는 있어도 ‘문제 자체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 뿐이다. 대중의 요구와 주장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보다 ‘한층 높은 담론’으로 ‘번역’해주자는 것이다. 그것이 대중의 요구와 보도자의 사회적 책무 그리고 사회 발전 모두를 얻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신문과 방송은 각각 언어의 두 측면인 글말과 입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사사롭고 감성적인 통속어가 아닌 무미건조하고 냉랭한 공용어를 사용한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언어를 객관화하고 이성적인 쓰임새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한국어는 좀 더 객관적인 기능, 이성적인 사용 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보도 행위들이 지나칠 정도로 다양한 사건, 수많은 갈등과 충돌, 사회적 분노와 혐오 등의 문제를 부각하는 데 소모되고 있다. 쿼어축제 같은 데서 나오는 ‘전반적인 요구’를 담지 않고 일부 자극적인 구호를 중심으로 보도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문제 자체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 뿐이다. ©news1

한국어의 공적 표현 가운데 대표적인 비합리성이 아마 어설픈 호칭 체계와 지나친 존대법의 남용이 아닌가 한다. 이 두 부문의 언어적 비합리를 냉정하게 치유 혹은 수술할 능력은 학계보다는 저널리즘이 더 적합할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시민사회의 모습을 언어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될 것이다. 이 이상 지나치게 혈연적 호칭이나 사적인 관계 중심의 호칭 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시민화’는 더 이상 쉽지 않을 듯싶다.

저널리즘이 사용하는 언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호의적인 혹은 적대적인 감정을 사기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도 언어를 객관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의 개념화는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술 담론을 통해 결정하는 만큼 개념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많은 보도 언어 가운데 학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용어도 꽤 많다. 대개 저널리즘이 사용하면서 마치 수사적인 용법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몸싸움’이라 하면 그것이 폭력이었는지 약간 심한 접촉이었는지 알기 어렵다. 그 개념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아니, 그 개념의 불확실함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사용했는지도 모르겠다.

매우 진지하게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혹은 반대로 ‘유흥가가 흥청망청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어떤 ‘경제지수’를 근거로 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시행될 때도 어떤 집단을 모집단으로 삼아 전체 경기를 진단하는지, 또 그 모집단이 경제 진단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 무게를 지닌 집단인지 등을 함께 명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저널리즘 언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저널리즘 언어는 시민사회의 개인적 이익, 공유하는 가치관, 새로운 흐름 포착 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저널리즘과 시민사회 통합

우리 저널리즘은 언어와 문자를 보급하고 정착 시키고 규범을 완성해나가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언어 규범이 지금만큼이나 뿌리를 내린 것은 교육과 저널리즘 그리고 문학 세 영역의 노력이 가장 값지지 않았는가 한다. 규범 정착의 문제를 넘어 다음의 시대적 욕구와 희망은 ‘시민사회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널리즘이 시민사회의 ‘언어’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할 것인가는 지난날의 경제발전이나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세계화 못지않은 중차대한 과제다.

시민사회의 완성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언어’이며 이 언어로 이루어진 담론을 최종 소비자(혹은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일은 저널리즘의 몫이다. 지금까지 저널리즘이 다분히 몸으로 때우고 언어를 소비, 소진하는 직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언어를 다듬어 기르고 시민사회에 유용한 접착제로 발전시키는 통합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